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835호
2021. 12. 13

정책동향

- | 기대에 못 미치는 SOC 예산, 문제 해소에 역부족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다양한 민간투자 방식 모색 필요

시장동향

- | 미국 디자인 빌드 시장의 이유 있는 성장

산업정보

- | 저효율·고비용 우려... 스마트홈 표준 필요하다

건설논단

- | 다다익선 민간투자사업, 적극 활용 도모해야

기대에 못 미치는 SOC 예산, 문제 해소에 역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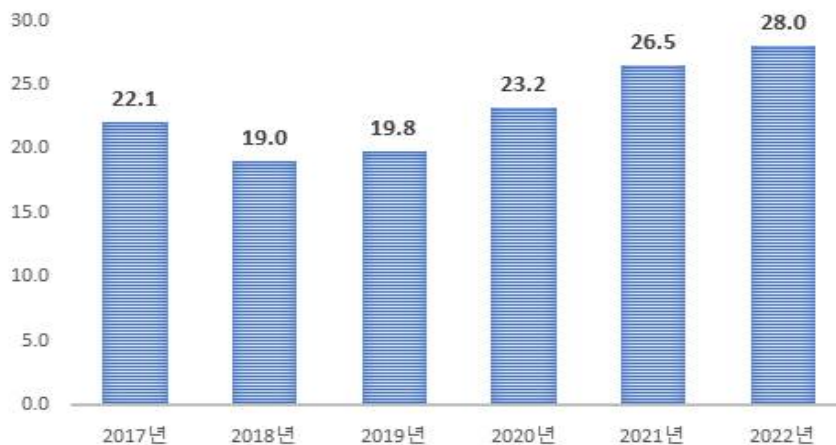
- SOC 예산 28조원 확정, 노후 인프라 대응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어려울 듯 -

2022년 SOC 예산 28조원 확정, 2021년 대비 5.7% 증액

- 12월 3일, 2022년 SOC 예산이 정부 예산안 대비 5,000억원 증가한 28.0조원으로 국회를 통과하여 최종 확정되었음.
 - 2022년 정부 예산 규모는 607.7조원으로 최종 확정됨. 이 중 SOC 예산은 28.0조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4.6%를 차지하고 있음.
 - 2022년 SOC 예산은 2021년 26.5조원 대비 5.7% 증액된 28.0조원으로 국회 의결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27.5조원 대비 5,000억원이 증액됨. 1)

<그림 1> 최근 6년간(2017~2022) SOC 예산 편성 추이

(단위 : 조원)



주 : 단, 2020년까지의 예산은 추경을 포함한 예산임.
 자료 : 기획재정부 각 년도 확정 예산 보도자료

- 교통 및 물류 분야에서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SOC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면서 22.7조원 규모로 확정되었음.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18개 사업에 8,096억원이 반영되어 2021년 4,007억원 대비 2배 이상 편성되었음. 구체적으로 평택-오송 철도 제2 복선화, 대구산업선 철도, 서남해안 관광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이 본격 추진될 예정임.

1) 주요 증액항목으로는 공공 및 지방 의료 인프라 확충,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2단계, 도시철도 노후 시설 및 차량 개선 및 지방국도사업 등임.

- 이와 함께 GTX A·B·C 노선 등 광역, 도시철도 건설 예산도 2021년 대비 40% 이상 증액 편성되어 속도를 낼 전망이다. SOC 안전 강화를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로·철도·교량 개선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스마트화를 위한 예산 2.4조원을 편성하였음.
-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는 지역 거점 육성을 위해 노후공단 기반시설 정비에 796억원, 캠퍼스 혁신파크에 210억원, 혁신도시 건설 등에 240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 이와 함께 그린스마트 스쿨사업 대상이 500여 곳이 늘어나 587억원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규 편성되었음. 또한, 청년층 월세 특별지원 821억원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 시범사업 90억원, 주거급여 2.2조원 등 주거복지 관련 예산도 대폭 늘어났음.

■ 기대에 못 미치는 SOC 예산, 노후 인프라 대응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여력 부족

- 최근 코로나 19의 재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 가능성 증가 및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SOC 예산은 30조원 이상의 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금번 SOC 예산은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임. 특히, 교육 예산 20%, 보건·복지 예산 9.0% 증액 등 타 분야의 증가율을 감안하였을 때, SOC의 예산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분야별로는 정부가 제시하듯, SOC의 디지털화, 노후 SOC에 대한 대응은 물론, 지역 간 인프라 불균형 해소 및 지역 생활여건의 향상 등 선제적 투자가 필요한 분야들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확대가 필요함.
 - 노후 SOC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철도시설은 물론, 도로 및 교량, 터널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예산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산의 투입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사업비가 본격적으로 투입되는 시점인 2022년 이후를 고려할 때,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정 재정투자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 특히, 지난 8월 발표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1~2025년까지 SOC 예산은 연평균 3.3%를 예정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과 SOC의 안전 강화를 위한 적정, 적기의 예산투입을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함.
- 기 추진을 발표한 ‘생활 SOC 확충’, ‘도시재생사업’, ‘노후 인프라 투자계획’ 및 ‘한국판 뉴딜’ 등의 추진과 기후변화, 탄소중립 대응 관련 인프라 투자 등 신규분야 투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SOC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SOC 관련 다수의 현안을 감안, 재정지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SOC 예산의 편성 및 지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김영덕(선임연구위원 · ydkim@cerik.re.kr)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다양한 민간투자 방식 모색 필요

- 기존의 민간투자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민간 참여방식 개발해야 -

■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수요 증가

- 과거 고도 성장기에 집중적으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그린 인프라,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 인프라의 확대 요구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사회기반시설 투자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가령 현재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²⁾은 약 30만개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들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연간관리비용은 2019년도 말 기준 12조원에서 2030년에는 26조원, 2050년에는 52조원 규모로 급증할 것이 예상됨.

<표 1> 노후 시설물에 대한 연간 관리비용 투자실적 및 미래비용 추계

(단위 : 조원)

구분	2017년	2019년	2025년	2030년	2040년	2050년
국 가	5.5	7	12	16	24	33
지자체	4.6	5	8	10	15	19
전 체	10.1	12	20	26	39	52

자료 :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 또한, 기후변화, 각종 안전사고 발생,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 SOC’³⁾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 48조원(국비+지방비)을 투자할 계획임.

<표 2> 생활 SOC 투자 대상 및 계획

시설 구분	대상 건축·시설물 및 투자 목표[2017년 12월 말→2022년 말(착수 기준)]
체육, 문화	공공도서관(1,042개→1,200개) / 공공체육관(963개→1,400개) / 공공수영장(406개→600개) / 생활문화센터(141개→300개)
기반시설	LPG 배관망(1.3만 세대→5.5만 세대) / 주차장(연평균 1천면 공급→3년간 1.1만 여면 공급)
자녀 돌봄	국공립 어린이집(6,090개→8,600개) / 국공립 유치원(10,896학급→12,900학급) / 돌봄센터(17개소→1,800여 개소)
취약계층	고령자 복지주택(2,426호→4,000호) / 공공요양시설(110개소→240개소)
공공의료	지역책임의료기관(40개 지정) / 주민건강센터(66개→110개)
안전	다중시설(720개동 보강) / 우수저류시설(91개소→127개소)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 「생활SOC 3개년 계획(안) [2020-2022]」, 정부발표자료 p.14.

2)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교통시설, 유통·공급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에 속하는 15개 시설물을 말함.
 3) 생활 SOC란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공원 등 일생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을 말함(「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2조 참고).

■ 넘쳐나는 시중 유동성을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 최근 수년간 급격한 지출 확대로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음.
 -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처음으로 5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GDP의 6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표 3> 우리나라 중기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 조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통합재정수지	(-)90.3	(-)55.6	(-)64.5	(-)69.4	(-)72.6
관리재정수지	(-)126.6	(-)94.7	(-)104.7	(-)108.4	(-)109.2
국가채무(GDP 대비)	955.3(47.3%)	1,068.3(50.2)	1,175.4(53.1)	1,291.5(56.1)	1,408.5(58.8)

자료 : 기획재정부(2021) p.9의 자료 인용.

- 반면 코로나 사태 극복과정에서 풀린 재정자금, 경상수지 흑자 지속,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직접투자 확대로 시중의 단기부동자금은 금년 6월 말 기준 1,5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됨.⁴⁾
- 따라서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해 넘치는 시중의 민간자본을 생산적인 사회기반시설 부문으로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임.

■ 민간이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 확보가 필요

- 최근 투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기반시설들은 개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시설물의 특성상 단일 시설물에 대한 개발로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때문에 (단일 시설물 개발만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성이 확보됨으로써) 대형 신규 시설물(주로 도로, 철도, 교량 등) 건설사업에 활용될 수 있었던 민간투자사업⁵⁾을 이들 시설물에 활용하기 어려움.
- 이들 시설물이 법적으로 주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인 경우가 많으나, 이들 재산의 관리·처분을 규율하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서는 국·공유재산을 민간에 매각·대부·양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방식에 대해서도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늘어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는 것 외에도,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 상에 일반 국·공유재산에 대한 다양한 개발·이용방식을 허용하고, 민간 투자자들이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 금융투자구조를 허용해 주는 것이 필요함.

김정주(연구위원 · kjj@cerik.re.kr)

4) 서울경제, “숨죽인 시중자금… 11월만 쳐다본다”, 2021. 10. 25.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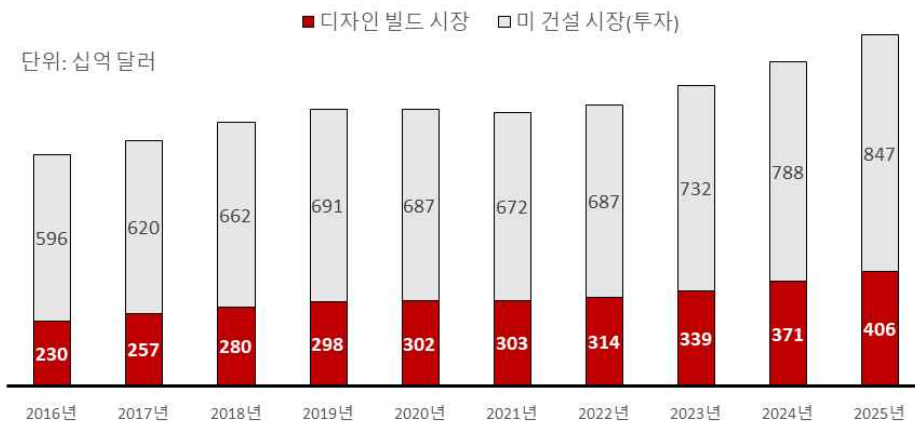
미국 디자인 빌드 시장의 이유 있는 성장

- ‘만족’ 응답 77%, 공기 단축 효과가 가장 크고 사회적 약자 배려에도 성과 탁월 -

■ 미국의 디자인 빌드 시장의 규모와 성장세⁶⁾

- 디자인 빌드 시장은 2025년까지 약 4,00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연평균 성장률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약 7.6%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됨.
 - 특히, 플로리다(South Atlantic), 텍사스(West South Central, 연평균 8.8%) 등 건설 투자가 빈번한 대형주(州)의 연평균 성장률은 8%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디자인 빌드 시장의 규모는 2025년을 기준으로 미국 건설투자의 4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
 - 2021년의 경우 디자인 빌드가 42%, 대체적 발주방식(CM at Risk 등) 35%, 설계시공분리가 23%였음.
 - 2025년의 경우 디자인 빌드 47%, 대체적 발주방식이 38%, 설계시공분리가 15%가 될 것으로 분석함. 이를 통해 설계시공분리방식의 적용이 계속 축소되는 것도 예측할 수 있음.
 - 공종별로 살펴보면, 도로(16%), 교육시설(15%), 제조공장(13%) 등에서 디자인 빌드 발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미국 건설시장에서 디자인 빌드 시장 규모 예측⁷⁾



6) DBIA, 「Design Build Utilization Update, FMIConsulting., 2021,9의 주요 내용을 요약.

7) 미국 건설시장 투자금액은 공사비, 설계 및 엔지니어링비용, 관리비, 이자, 세금 등을 포함한 것임.

■ 미 건설산업 주체의 77% 이상이 디자인 빌드 활용에 긍정 응답(설문조사)

- 디자인 빌드의 만족도(77%)는 CM at Risk(44%), 설계시공분리(32%)의 만족도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발주자, 설계자, 건설회사 등 모든 주체가 디자인 빌드를 활용함으로써 공기 단축(패스트 트랙 적용)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평가함(89%).
 - 다음으로 '혁신기회가 많음(85%)', '협력과 창의의 증진(84%)' 순으로 나타남.
 - 설계자는 다른 주체에 비해 디자인 빌드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음.
- 참고로 발주자가 당해 사업의 발주방식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발주자의 목표 달성(60%), 사업의 복잡성과 혁신(50%), 일정(46%), 시공자의 경험(46%) 순으로 나타남.
 - 2018년의 조사에서는 일정(48%), 발주자의 목표(60%), 시공자의 경험(45%), 공사비(41%)로 나타났음.
 - 2021년 조사에서는 발주자의 목표와 사업의 복잡성과 혁신이 주요 고려 요소로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디자인 빌드 조달의 약 47%가 최고가치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다음으로 공사비가 아닌 기술 등 역량 기반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QBS(Qualification Based Selection) 방식이 24%, 지명 혹은 협상 방식이 16%, 최저가 방식이 16%인 것으로 조사됨.
 - 공사비 지불방식으로는 총액계약(47%)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GMP(최고한도보증액, 39%), 여타 방식이 13%를 차지함.
- 미국의 사업에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는 MWDBE(Minority, Women, and Disadvantaged Business Enterprise, 소수, 여성 및 취약자 기업)의 참여가 디자인 빌드에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임.
 - 조사대상 디자인 빌드 사업의 43%에서 MWDBE가 참여하였음. 설계시공 분리방식에서는 32%, CM at Risk에서는 16% 정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 디자인 빌드가 MWDBE에 대한 기회를 더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디자인 빌드의 경우 발주자의 MWDBE에 대한 철학을 초기에서부터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타 방식보다 그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최석인(선임연구위원 · sichoi@cerik.re.kr)

저효율·고비용 우려... 스마트홈 표준 필요하다

- 제조사별 다른 표준 적용, 사용자 적응 어렵고 시장 성장에도 제약 -

■ 스마트홈 표준이 필요한 이유

- 스마트홈에는 거주자들의 편의와 쾌적, 안전을 위해서 다양한 센서와 장치, 가전제품 등이 사용됨. 단일한 제조업체의 것으로만 구성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제조업체별로 다른 데이터 표준이 다수 존재함.
- 스마트홈 거주자(사용자) 관점에서 보면 사용하는 제조사가 다른 스마트홈 장비별로 다른 앱이나 플랫폼을 복수로 사용해야 하며,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장비들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 제조업체별로 배타적인 울타리에 갇힌 스마트홈 장비들을 사용해야 함으로써, 선호하는 복수 제조업체의 스마트홈 장비들을 도입한 사용자는 중복된 기능으로 인한 과부하를 피할 수 없음. 또한, 장비 간 데이터 호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스마트홈이 저효율·고비용의 시스템이 될 우려가 존재함.
 - 제조업체별로 스마트홈 구성과 사용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거주자가 스마트홈 사용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이는 스마트홈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옴.
- 스마트홈 공급자(건설회사 또는 장비공급자) 관점에서 보면 기업마다 서로 다른 표준을 사용하므로 스마트홈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사업체계를 가지게 됨.
 - 기업별로 스마트홈의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스마트홈 구성요소를 모두 공급해야 하는 구조가 됨으로써 특정 분야별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력 확보가 어려움.
 - 공급자 중심의 시장구조로 인해서 시장 확대가 어렵고 전문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 때문에 장의 다양성과 사용자에 대한 매력도가 저하됨.
- 스마트홈의 사용자 편의성과 시장 성장성의 상관성에 중요 가치를 둘 때 어떠한 제조업체의 스마트홈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호환 가능한 환경이 필요함. 스마트홈의 표준과 프로토콜에 대한 시장의 인식 역시 확대되고 있음.
 - 스마트홈 센서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비 간의 데이터 이동에 막힘이 없을 때 사용자 중심의 스

마트홈 상품의 발전이 가속화될 것임.

- 사용자 의지를 전달하는 인공지능 스피커와 장비들의 연계기반인 플랫폼, 그리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홈 장비 등에 대한 전문화된 영역별로 시장경쟁이 가능해짐으로써 사용자 친화적인 스마트홈 서비스가 발전하고 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

■ 국내 스마트홈 플랫폼 동향

- 스마트홈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내 기업들은 삼성전자(삼성싱스), LG유플러스(U플러스 AI), LG전자(LG씽큐), SK텔레콤(누구) 등이 있으며, 이 중 삼성전자의 삼성싱스가 70% 가까운 시장을 차지하고 있음.
 - 삼성전자 '스마트싱스'의 사용자가 531만명으로 전체 69.5%를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LG유플러스 'U플러스 AI' (46만명, 6%), LG전자 'LG씽큐' (43만 6,000명, 5.7%), SK텔레콤 '누구' (31만 6,000명, 4.1%) 등의 순임. 그 외 샤오미(28만 2,000명), 구글(25만 8,000명)도 국내 시장 일부를 차지함.
- 건설회사의 스마트홈 플랫폼은 초기 단계 기술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이 자체 플랫폼 개발에 투자하고 있음.
 - GS건설은 2019년 말에 자이S&D와 자이AI 플랫폼을 발표했고, 삼성물산은 2020년에 삼성SDS와 래미안A IoT 플랫폼을 개발하였음. 현대건설은 2018년에 지주사 현대자동차그룹 IoT 스마트홈 시스템 하이오티(Hi-oT) 플랫폼을 공개하였음.
 - 포스코건설은 2019년에 아이큐텍(AiQ TECH)을 공개했고, DL이앤씨는 2021년 초에 스마트홈 3.0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대우건설은 2021년 초에 플랫폼 소프트웨어개발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플랫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건설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각 기업마다 자체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은 자체 브랜드의 스마트홈 장비(device)들을 구동하기 위한 방편이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복수의 앱을 설치하고 개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 글로벌 스마트홈 표준 동향

- 2014년 9월 삼성전자, 인텔, 시스코, 미디어텍 등 4개사가 창립 모드 멤버로 사물인터넷 표준단체로서 OIC(Open Interconnect Consortium)를 창립하고, 스마트홈 대표 국제표준단체인 UPnP 포럼을 통합흡수하여 100개의 회원사로 성장하여 2016년 2월까지 활동함.
- OIC가 UPnP와 AllSeen Alliance도 합병하면서 2016년 2월 전 세계 450여 기업이 IoT 표준화 기술 개발을 위해서 OCF(Open Connectivity Foundation)로 재탄생하였고, 가전제품끼리 연동할 수 있는 IoT 생태계 구축이 목표였음.

- OCF 생태계를 조성하려면 회원으로 참여하는 가전사와 통신사가 표준규격에 맞춰 제품을 개발해야 함.
- IoT 기술규격에는 제품·서비스 간 연동을 위해 D2D, D2C, C2C 기술로 규격화되며, D2D(Device to Device)는 제어기와 IoT 기기가 직접 연결된 서비스, D2C(Device to Cloud)는 제어기가 연결된 클라우드에 IoT 기기를 연결한 서비스, C2C(Cloud to Cloud)는 제어기가 연결된 클라우드와 다른 클라우드와의 연동을 통한 IoT 기기 서비스 등으로 구분함.

■ 매터(Matter)의 등장

- 서로 다른 공급자 간의 파편화(서로 다른 표준으로 인한 호환 불가능 상태)를 줄이고 스마트홈 기기들과 플랫폼 간 상호운용성을 위해 2019년 12월 공개된 프로토콜인 CHIP(Connected Home over IP)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가 2021년 5월 Matter로 개명함.
- 아마존, 애플, 구글, 컴캐스트, 지그비 얼라이언스(Zigbee Alliance) 등으로 구성된 CSA(Connectivity Standard Alliance)가 이 프로젝트 그룹을 시작함.
 - 사물인터넷(IoT) 통신 프로토콜 규격 세계 연합체인 지그비 얼라이언스(Zigbee Alliance)는 스마트 전구나 경보 센서와 같은 일부 스마트홈 장치에 사용되는 에너지 효율적인 지그비 네트워크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함.
 - 매터 역시 이 지그비 얼라이언스를 근간으로 두고 자사의 기술을 개발했는데 지그비를 넘어서 더 큰 임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이름에 반영하기 위해 CSA(Connectivity Standards Alliance)로 개명함.

■ 시사점

- 스마트홈 표준은 궁극적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스마트홈 시장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킨다는 관점에서 공급과 수요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는 기술임.
- 건설산업에서 개발하는 스마트홈 플랫폼은 개발에 투입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한 보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지관리와 업그레이드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글로벌 표준에 기초한 스마트홈 시장확대 관점에서 시장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표준에 기반하여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와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 발굴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투자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스마트홈 전략임.

김우영(연구위원·beladomo@cerik.re.kr)

다다익선 민간투자사업, 적극 활용 도모해야

정부 재정소요의 급증으로 재정투자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통합재정수지는 2018년 이후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이며, 연기금을 제외한 순수 정부 부분의 수지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2005년 이후 2007년을 제외한 모든 기간에서 적자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국가부채비율은 2021년 말 GDP 대비 47.3%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현재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2025년에는 58.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사회기반시설은 노후화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투자사업은 풍부한 민간 자금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 공급하는 것은 물론, 유동자금을 경제 활성화로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필수 사회기반시설의 조기확보에 기여한다. 복지 등 여타분야의 지출 확대로 필수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나, 민간투자사업은 신속한 자본 투입 및 공기(工期) 준수 등으로 재정사업보다 조기 준공이 가능하고, 적기 확보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은 단기적으로 재정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해 장기적으로도 재정부담을 감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투자사업의 이러한 장점으로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향(2019.3.13)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2020.1.14)을 발표하였다.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53개로 한정된 대상시설을 모든 사회기반시설로 확대하였다. 또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기관 다원화 및 경제성 분석 면제 도입을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하였다.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산업기반신용보증 최고한도액을 상향하였다.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인 혼합형 민자방식(BTO+BTL)을 제시하였으며, 관리운영기한이 도래한 민자사업의 재투자모형을 개발하고, 노후 재

정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용을 도모를 위해 개량·운영형 사업모형을 개발하였다. 그 외에도 부대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기간 확대,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 가점 상향 등을 추진하여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민간투자사업 집행실적은 사업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투자비는 2018년 3.5조원에서 2020년 4.2조원으로 소폭 증가에 불과하다.

해외의 주요국들은 노후시설물을 유지보수, 개량, 개선하는 사업에 민간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기존 유료도로를 운영·임대한 시카고 Skyway 사업, 기존 노후 터널을 개량 및 유지관리하는 Elizabeth River Tunnels 사업 등 다양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영국은 런던 Hounslow Highways의 관리와 자치구 내의 모든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프로젝트, Sheffield시 전역의 고속도로 시설의 개량 및 유지보수하는 프로젝트, 노후화된 학교를 재건축하는 프로그램 등 노후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호주는 우리나라의 정부고시사업과 유사한 시설물 우선순위 목록(Infrastructure Priority List)을 2016년부터 정기적으로 공표하여 민간자본이 노후 사회기반시설 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정부의 지출이 요구되고 있으며, 노후시설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투자사업은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처방전이 될 전망이다. 따라서 해외의 주요국들처럼 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주경제, 2021.12.10>